

| 기획취재 |

중소기업계가 논의 주체로 참여하게 된 것 큰 의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인터뷰



지난 2월 28일 치러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이 당선됐다. 김기문 회장은 1988년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를 창업해 시계, 주얼리, 화장품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중견기업으로 키웠다. 충북 괴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도 수료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두 차례 중앙회장을 지내, 이번이 세 번째 임기다.

이번 당선으로 김 회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위원으로의 활동도 시작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어려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김 회장의 소회를 들어봤다. 이번 인터뷰는 조직개편과 인사 등으로 인해 서면질의와 답변으로 진행됐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장에 당선되면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선 두 차례의 임기 동안과 현재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그 때 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007년에 중앙회장에 당선된 이후 2008년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왔습니다. 내수와 수출 부진 등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은 쾅쾅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동네 음식점을 가거나 산업단지의 공장들을 가보면 사장님들이 그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성장률과 투자, 고용, 소비 등 모든 경제지표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속화되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올해 1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 했으며, 기업회생 신청건수도 총 82건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최고점을 찍은 지난해 1월과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내국인을 구할 수 없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올해 1분기에는 5년 만에 외국인 근로자 신청도 미달되었습니다. 경기 부진과 경영 악화로 생산 활동 위축에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신청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제위기 때 중소기업계가 이겨낸 경험을 돌이켜보면 앞으로도 제대로 된 현장파악과 정책 진단을 통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엄중한 경제 환경 속에 무방비 상태에 몰려있는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잘 대변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계가 당면한 굵직한 현안은 물론 개별 기업·조합들이 가지고 있는 미시적인 애로사항까지 헤아리는 중소기업계의 심부름꾼으로서 당당하게 할 말 하고 할 일하는 중앙회장이 되려고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앞장서서 할 말 하고 할 일 하는 당당한 중앙회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중앙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생각이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는 우리나라 사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변기관입니다. 정책과 법제도를 활용하는 입장으로서는, 국회와 정부, 대기업, 노동단체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사항은 요청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중앙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앙회가 가진 특성이자 장점은 다른 기관과 달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정책입안, 행정업무, 규제 개선 등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안산에 있는 금형(뿌리산업) 중소기업을 방문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계 최대 이슈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계의 상황과 간절한 호소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임기 때 중앙회 임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들을 발굴해서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현장성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부분이 중소기업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당당한 중소기업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계에 갇힌 억지 주장이 아닌, 중소기업계를 뛰어넘어 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업체 수, 관련 근로자, 일자리 창출 규모 등을 보더라도 중소기업은 국가운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을 제시하고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이라는 생각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업종의 대표성을 가지고 해당 중소기업 정책에 현장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시키고 협업사업 등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공정한 경제구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적정 원가를 보장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도 납품단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원재료에 대한 적정 원가를 보장받지 못하니 그 사이에 끼어있는 중소기업은 살길이 없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나오는 얘기가 대기업으로부터 적정 납품단가를 보장받아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단가 중 재료비의 일정부분을 초과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지만, 거래 도중에 개별 기업이 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개별 중소기업이 적정원가 제공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합이 중심이 되어 업종별 품목별로 적정원가를 산정하고 각 개별 중소기업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지요. 원가 구성이 단조로운 업종과 품목을 우선 선정하고, 공공조달시장부터 시범 시행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면 근본적인 공정경제시장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중앙회 조직개편에서도 본부 명칭을 개편하고 표준원가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려고 합니다. 최근 고용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이 심각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청년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미스매치 상황에서 중앙회가 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의 환경을 스마트하게 혁신하고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을 찾아 홍보하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제조 중소기업과 연결하는 스마트 플랫폼을 만들어 주고, 우수한 임금·근로조건·복지환경 등으로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홍보하는 활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낙연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저임금의 소상공인 구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과 특별연장근로 적용대상 확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요건 완화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중앙회장에 출마하기 전에도 주변 기업인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 애로를 많이 호소했습니다.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방문한 현장에서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이야기가 주를 이루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에서 이미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이 체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해야 하고, 국회에서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해서 영세기업이 감내할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2년 연속 29.1%의 최저임금이 올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에 심각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제 도입이 동시에 추진되어 인력난에 시달리는 뿌리산업 등 영세 제조기업의 어려움은 배가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이 경제주체의 4분의 1에 달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생계를 접는 상황까지 발생하는데, 아직 사회적으로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황인 만큼 최소한 그들이 수용력을 가질 때 까지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지만, 아직 현장은 이렇다 할 대안과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비용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영세기업보다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계도기간을 9개월 썩 준 것은 현장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노사관계 속에서 그나마 경사노위가 이룬 노사합의는 존중해야 할 부분이지만, 정말 어려운 기업이 필요로 할 때는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연장근로를 50인 이하까지 확대해주는 부분은 지금 영세기업들의 막막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줄 수 있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현안도 중요하지만 산업이 다변화되고 제조업의 위기가 닥친 지금,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해 줘야 하는 부분 중 하나는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경기상황 속에서 기업을 유지해야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며 혁신하게 하기 위해서 가업승계 여건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장수기업의 대부분은 가족기업이라고 합니다. 한국 제조기업의 85%도 가족기업이지요. 제조기업의 스마트화도 필요하지만 제조기업이 대를 물려 장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도 해결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작년부터 어렵다는 기업 사장님들은 사업을 접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나마 성장의 가능성이 보이는 업체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어려운 결정을 하고 나서도 또 한 번 부딪히는 벽이 가업승계 요건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라는 것은 법인의 주식이나 개인회사의 토지, 기계 등을 승계하여 사업을 지속하는 것인데 이때 현금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기업을 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계의 걱정 없이 기업인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 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하는데 긍정적이고 기초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임기 때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늘려 승계시 수반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제한도 증가는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본질적 취지와 맞지 않는 사후관리 요건이 실제 승계하려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 유지라는 큰 뼈대를 남기고 10년 동안 자산·업종·지분·고용 유지라는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산업이 융합되고 변하는 과정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도 예전과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승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상속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현재 경기상황에서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낡은 편견에서 벗어나 경제적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틀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기구가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서 중소기업의 목소리와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무슨 일이든 소통이 잘 되어야 타당하고 수용성 높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대립적 노사관계 문화가 짙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대화가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소통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위원으로 위촉된 점에서 자긍심을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중앙회장으로 다시 오면서 중소기업을 넘어선 전 국민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제안, 추진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사회적 대화기구 위원 중 한 명으로서의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는 아직 소통이 익숙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합의 과정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 보면 과도기적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미를 찾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대화 시작의 취지가 현재 경제와 사회, 노동 상황에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모두가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출범부터가 순탄치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갈등을 넘어서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출범되어, 이제는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합의,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등 조금씩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중소기업계는 경영계로서 간접적인 참여를 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편에서 직접적인 논의 주체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도 이해당사자의 참여 폭을 넓힌 위원회 개편의 또 하나의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경제구조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수급기업이 전체기업의 47%에 달하는 구조에서 공정한 경제 구조 조성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임금의 양극화가 심한 상황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실과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임기 때 경제 3불(시장 불균형, 거래 불공정, 제도 불합리) 문제 해소를 통해서 공정경쟁의 틀을 만드는 경제민주화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적합업종 선정,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강화,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금지 등을 추진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그 때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대-중소기업 간 풀지 못한 불공정·불균형의 실타래가 남아 있습니다. 이같은 해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는 결국 사회 불평등과 같

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웬만한 근로자가 영세 사업장 대표보다 소득이나 삶의 질에서 낮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와 사회가 많이 변화했고, 기존의 관념이나 판단의 잣대로 현상을 이해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경사노위에서 「양극화 해소와 고용+ 위원회」를 신설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계가 해당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현실과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